

# 부 의 안 건

고양시 청소년의 환경교육을 위한 생태학교 설립

의 안 번 호	2024-02
의 안 종 류	정책제안서 (의견제안)
소 관 위	교육상임위원회
발 의 연 원 일	2024년 9월 21일
발 의 의 원	곽지유 의원 등 5명
찬 성 의 원	곽지유 의원 등 5명

고양시 청소년의회

## 고양시 청소년의 환경교육을 위한 생태학교 설립

###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으로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졌다. 대표적으로 농수산 생태계 교란, 생물 다양성 감소, 폭염, 집중호우, 대기오염 등이 현 인류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강남역 일대와 신림동은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였다. 최근 환경문제는 ‘기후위기’라고 불리우는 만큼 심각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 전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지난 2015년 기후변화협정인 ‘파리협정’이 채택되어 2050년 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맞춰야 하는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에 각 국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지금 바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생활양식 변화는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소년 대상의 교육은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독일과 같은 일부 환경 교육 선진국가는 이미 청소년 대상의 생태 교육 과정을 필수로 넣고 있으며, 친환경 실생활을 청소년시기부터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 2. 사업목적(제안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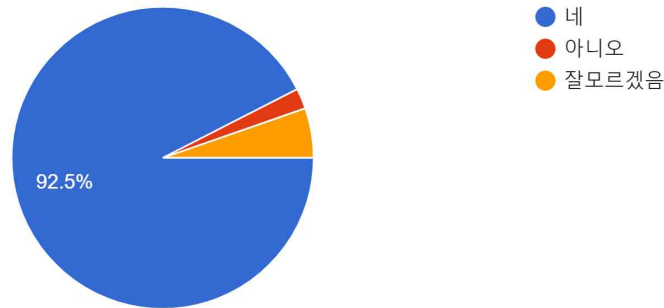
기존 강의식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닌 현장 탐조 방식과 같은 현장 참여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보다 효과성 높은 환경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에 대한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생태학교’라는 이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환경교육센터가 운영하게 한다. 참여형 교육의 강점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교육 분야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교육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수동적인 형태의 교육이 아닌 청소년들이 직접 고양시의 환경 보존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저탄소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응답자 322명)에 따르면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92.5%,(별첨1) 청소년 대사의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시민이 91.9%(별첨2)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시민의 대다수는 교육의 필요성에도 함께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 문제의 첫단추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될 필요가 절실하다.

1. 현재 환경(이하 기후/생태계/에너지 모두 포함)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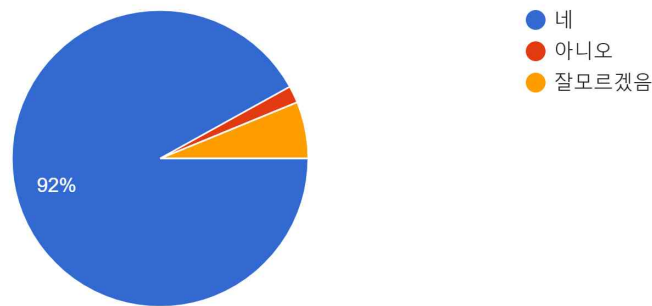
응답 319개



별첨1. 환경문제 심각성에 대한 시민 인지도

3. 청소년 대상의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323개



별첨2. 청소년 환경교육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 결과

### 3. 시업대상(수혜자)

○ 고양특례시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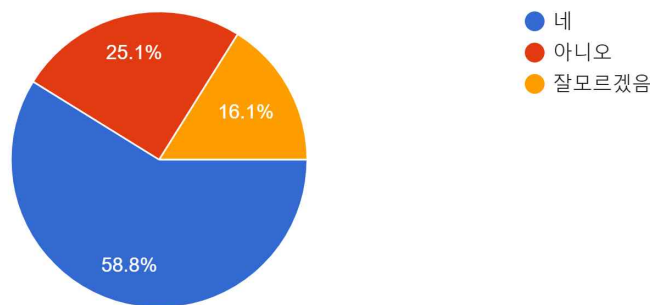
### 4.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현재 고양시에는 ‘고양시생태환경교육센터’ (이하 환경교육센터)가 존재하며,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와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정책 방향이 나와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이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환경교육센터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이 자율 신청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홍보와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단순한 지식 전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을 넘어서, 고양시에 있는 녹지나, 산림 등 실제 생태 장소를 방문하여 모니터링, 탐조하는 형식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환경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2021~2025)을 발표하며 기후변화 및 환경재난 환경교육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기후변화 특화 프로그램 강화를 과제로 설정한 만큼 현재 교육보다 더 다양화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별첨1),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환경과 관련된 수업을 정기적으로 받아본 적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라고 답변한 비율이 58.7%(별첨3)에 그쳐 기존 환경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 초,중,고등학교에서 환경과 관련된 수업(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월 1회, 1학기 이상 환경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응답 323개



별첨3. 청소년 환경교육 실태

## 5.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고양시 청소년생태학교>

#### 가. 실습형 환경생태교육 강좌 개설

생태환경교육의 핵심은 사회공동체로서의 환경 보존의 의무와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친환경 생활을 습관화하여 실질적인 환경 보존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강의식 실습에서 현장 탐조의 참여형 강좌로 형태를 변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고양시의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터전(고양시)에서 환경적 보존 가치가 있는 곳을 직접 탐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양시의 대표 녹지 공간인 장항습지, 정발산, 고봉산과 각종 지역 하천의 생태계를 파악하고 기록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단순 체험 형태의 1회성 탐조가 아닌 최소 6개월 이상의 긴 탐조 프로그램을 통해 녹지 공간의 서식지에서 살고 있는 각 동식물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을 직접 파악하고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1년 단위로 고양시가 보존에 힘써야 하는 동식물 ‘중’ TOP10을 선정하여 고양시에 제안하는 파생 프로그램도 기획해 볼 수 있다.

- 생태학교 자체는 환경교육센터 내 프로그램 형태로 기획한다.
- 생태학교는 청소년들이 ‘자치’ 하여 학사 일정을 구성하거나 예산 집행을 하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청소년에게 맡긴다. (경기도 꿈의 학교와 같은 형태로 운영)
- 생태학교 내 필수 교육과정으로 현장 탐조 프로그램을 넣는다.

## 나. (별도 제안) 학교별 태양광 협동조합 개설

생태학교는 학교 밖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에 참여 시간이나 프로그램, 환경 보존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환경 보존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생태학교 소속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태양광 협동조합을 구성해 에너지 자립으로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학교 태양광 설치’가 있다. 단순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학교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 운영에 대한 권한을 학교에 맡겨 직접적으로 에너지 흐름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태양광 초기 설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만 이뤄진다면 에너지 자립 선도 교육을 할 수 있다.

### 6. 사업효과(기대효과)

환경교육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에 대한 의식을 높일 것이며, 학생들에게 환경 보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높여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생태학교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7. 소요예산(사업비)

- 조례나 생태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마련하고, 고양시장에게 해당 기금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다. (최소 7천만 원 이상의 비용 소요 예정)
- 환경교육에 배정된 예산 자체가 매우 적으나 최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참고 근거
  - 선장포 철새서식지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 4억 6,000만 원 규모
  - 서울시 마포구 환경센터(위탁운영)개설 비용 약 7천만 원
  - 서울시 환경교육 예산 20억
  - 서울 시립 청소년센터의 한 해 예산이 평균 30억 원
  - 환경부 차원의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원금은 0원